

**환 경 부
보도자료**

- ☐ '05. 4 배포
☐ 사진 없음
☐ 총 10쪽

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	이재현 과 장 김승희사무관	전화 (메일)	02-2110-6784 seunghye.kim@me.go.kr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대기분야 신(新)거버넌스 구축 가 .

6

- ☐ 환경부는 대기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처, 전문가, 시민단체,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·합의하는 대기분야 신거버넌스를 구성·운영한다.
- 현재 OECD 최하위수준인 수도권의 대기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수도권외 오염심화지역에 대한 대기개선대책도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
 - ‘수도권 T/F’, ‘경유차환경위원회’ 등의 성공경험을 대기분야 전반에 확산시켜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예방하고 품질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.
 - 또한 기후변화, 악취, 새집증후군 등 새로운 대기환경수요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분야별 대책 추진을 지원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것이다.
- ☐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대기분야 전반에 걸친 사안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대기환경정책포럼(위원장: 대기보전국장)을 운영기로 하였다.

- 대기환경정책포럼은 관계부처, 전문가, 시민단체, 산업계 등 분야별로 대표하는 관계자 20명 내외로 구성·운영(분기별 1회)되며,
-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, 대기환경기준 조정, 통합대기환경정책 등 대기보전 전반에 걸친 대책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게 된다.

□ 그리고 대기환경정책포럼을 뒷받침하는 6개 분과위원회(위원장: 담당과장, 15인 내외)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, 수도권특별대책 시행성과 모니터링, 사업장관리, 자동차공해, 새집증후군, 악취관리 등 분야별 세부대책이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하에서 수립·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.

- 향후 논의 예정인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대상국가로의 편입여부 등 대외협상과는 별도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대책을 수립·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추진 기획단('05.4.1 설치)에 대한 자문단(기후변화 분과위)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을 검토·자문토록 하고,
-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수도권특별대책의 시행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·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「푸른하늘 21」 과,
- 산업단지 대기개선을 위한 「사업장관리」,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을 위한 「교통·연료」, 새집증후군 관리를 위한 「실내공기질」, 악취방지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「악취관리」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.

<참고자료>

- 붙임 1. 대기분야 新거버넌스 운영계획
 2. 경유차환경위원회 운영성과
 3. 수도권특별법 및 경유승용차관련 T/F 운영성과

<붙임 1>

대기분야 新거버넌스 운영계획

추진목적

- ◇ 전문가·시민단체·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·합의하는 열린 대기환경정책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고객만족도 향상
 - 정책결정 초기부터 폭 넓은 대화를 통해 지식 확산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써 정책 실패 예방 및 품질 제고

□ 추진 배경

- OECD 최하위수준인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전국적 차원의 대기환경개선대책도 추진할 시점
 - ‘수도권 T/F’, ‘경유차환경위원회’ 등 성공적 경험을 대기정책 전 분야에 확산,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
- 기후변화, 악취, 새집증후군 등 새로운 대기환경수요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분야별 대책 수립·추진 필요

□ 대기분야 新거버넌스 구성 방안

대기환경정책포럼

- 위원장(대기보전국장), 환경부 및 관계부처 과장, 전문가, 시민단체, 산업체 등 20인 내외로 구성
 - *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필요시 차관으로 격상하여 운영

○ 주요기능

- 대기분야 전반에 걸친 사안 또는 현안사항의 의견조정 및 정책형성
 -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수립, 대기환경기준조정, 통합대기환경정책 수립 등

6개 분과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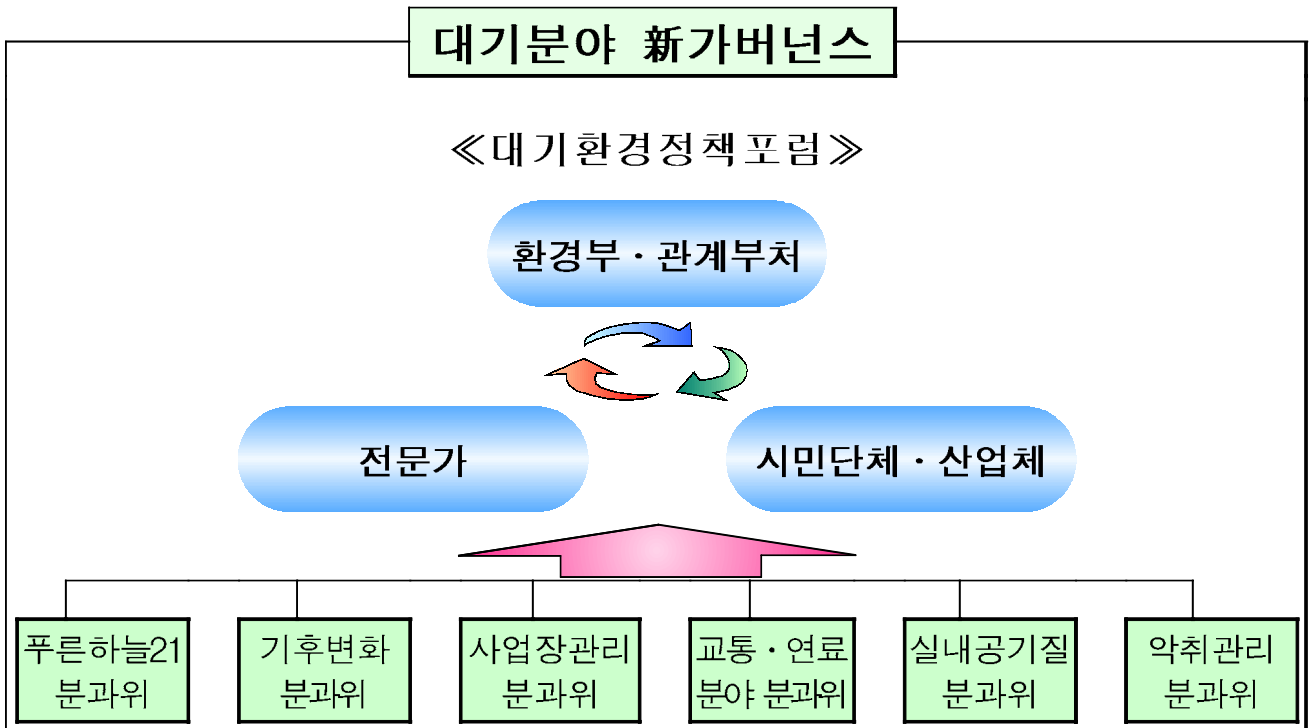
○ 대기보전국 담당과장, 전문가, 시민단체, 산업체 관계자 등 15인 내외로 구성

*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대기보전국장으로 격상하여 운영

○ 분과위 주요기능

- 기후변화 : 대기오염-온실가스 감축 통합대기환경정책 수립 및 온실가스 총량관리제 검토 등
 - * 온실가스감축 추진기획단('05.4.1 설치) 자문단을 기후변화 분과위로 활용
- 푸른하늘21: 수도권 특별대책 추진효과 분석 및 지자체 시행 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
- 사업장관리: 사업장 예고제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최적방지시설 설계기준 마련, 산업단지 오염심화지역 대책 수립 등
- 교통·연료: 저공해자동차 보급, 자동차 등 수송수단의 배출가스 저감대책 및 연료기준 설정 등
- 실내공기질: 실내공기질 관리, 생활소음 저감대책 수립 등

- 악취 관리: 악취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

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대기환경정책포럼은 분기별 1회 개최하되, 긴급한 현안사항, 분과위의 건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임시회 개최 가능
 - 2005년도 대기분야 업무설명 등을 포함 제1차 대기환경정책 포럼 개최(5월초)
-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되, 현안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

<덧붙임> : 대기환경정책포럼 및 분과위 주요기능

<덧붙임>

대기환경정책포럼 및 분과위 주요기능

구 분	주요정책과제	소관부서
대기환경정책포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- 대기환경기준 조정 - 통합대기환경정책 수립 -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방향 - 대기분야 중장기 투자재원 확보방안 	대기보전국
기후변화 분과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오염-온실가스 감축 통합 대기환경 정책 수립 -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및 배출계수 개발 - 온실가스 총량관리제(배출권거래제) 실시 -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전략영향평가지 도입 	대기정책과
푸른하늘21 분과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도권특별대책 추진과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- 수도권특별대책 추진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-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-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개정방향 검토 	대기총량제도과
사업장관리 분과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고제 배출허용기준 설정 - 최적방지시설 설계기준 마련 -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대상 확대 -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중 주유소 STAGE II 관리대책마련 - 특별대책지역사업장 총량관리 방안 마련 	대기관리과
교통·연료 분과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출가스 규제기준 강화 -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설정 -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방안 - 차차기 연료기준 설정 	교통환경기획과 교통환경관리과 대기정책과
실내공기질·생활소음 분과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- 유해물질방출 생활용품 관리방안 -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방안 -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 - 소음표시 의무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- 층간소음의 규제 및 민원해소방안 	생활공해과
악취관리 분과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악취방지 종합대책 수립 - 악취관리지역 지정 - 악취방지법 개정·운용방향 - 악취방지와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- 악취방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- 악취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 	대기관리과

<붙임 2>

경유차환경위원회 운영성과

□ 설립 및 운영경과

-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 결정('02.12 경제장관간담회)
 -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의 국제수준으로의 조정 등 경유차 전반의 대기오염대책 마련키로 합의
- 민·관·전문가 공동으로 「경유차환경위원회(위원장: 대기보전국장)」 구성·운영('03.1.11)
 - 8차례 회의('03.1.11~2.14) 및 공개토론회(2.6) 개최
 - 대기오염 증가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시행하는 조건하에 경유차 시판을 허용하는 권고안 마련('03.2.14)

□ 「경유차환경위원회」 권고안 주요내용

- 미세먼지 기준 강화(연평균): $70\mu\text{g}/\text{m}^3 \rightarrow 50\mu\text{g}/\text{m}^3$
-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,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, 무·저공해차 보급 등 경유차 오염저감대책 추진
- 휘발유:경유:LPG의 상대가격을 100:85:50 수준으로 조정
- 경유중 황함량기준을 430ppm에서 '06년부터 30ppm이하로 강화
- 「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」 조속 제정
-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개정, 대기환경개선금의 50%이상을 대기환경개선에 사용하고 중·장기적으로 연료에 부과
- 전기하이브리드차,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차량, CNG 등 저공해 연료사용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 및 보조금 강화

□ 권고안 이후 조치사항

- 경유승용차 허용의 전제조건 이행을 위한 정부방침 결정 ('03.5.30, 경제장관간담회)

〈 경제장관간담회 주요 합의내용 〉

- ① '05년 1월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을 허용
- ② 2003년말까지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」 제정
- ③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조사용역·공청회 등을 거쳐 '04년말 정부방침 결정, '05년 중 관련법 개정
- ④ 매연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자동차, 초저황 경유 보급 촉진을 위한 세제감면,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(용역을 통해 '04년중 정부방침 결정)
- ⑤ 대기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의 50% 이상을 대기환경개선에 사용(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지 않는 조건)

<붙임 3>

수도권특별법 제정 및 경유승용차 관련 T/F 운영성과

□ 구 성

- 경제장관간담회('03.5.30)에서 합의된 수도권특별법 제정과 경유승용차 대책추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Task Force 구성
 - 환경부 차관(당시 郭決鎬 차관)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, 전문가, 시민단체, 산업계, 15인으로 구성

□ 운영경과

- 제1차 회의('03.6.4): T/F 구성운영 및 수도권특별법 제정일정 협의
- 제2차 회의('03.6.27): 사업장 총량관리 대상물질 및 시행시기 합의
- 제3차 회의('03.7.3): 수도권 특별법 정부안 최종 합의
- 제4차 회의('04.3.19): 경제장관간담회 결정사항 이행현황 점검
- 제5차 회의('04.8.26): 에너지상대가격조정방안 논의
- 제6차 회의('04.9.21): 수도권특별법 하위법령 쟁점사항 합의

□ 주요 합의내용

- 대기관리권역 설정
 - 서울, 인천, 경기 24개시로 하되, 모델링 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된 5개 지역(이천, 동두천, 화성, 파주, 양주시)은 '07.7월 이전까지 오염도를 실측한 후 국가환경기준의 8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외
-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시기 확정
 - 1종사업장은 '07.7.1일, 2~3종 사업장은 '09.7.1일부터 시행

- 수도권지역에 조기 공급되는 초저황경유에 대한 교통세 등 15원/ℓ 세율 인하
 - 지원기간 : '04.10. 1 ~ '05.9.30(1년간)

□ 후속조치사항 및 평가

- 휘발유:경유:LPG 에너지 상대가격을 100:70:53에서 '07.7부터 100:85:50수준으로 조정('04.12.24, 경제장관간담회)
- 수도권특별법 ('03.12.31) 및 하위법령 제정('04.12.31)
- 수도권특별법 및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은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어 왔으나, 관계부처·시민단체·산업계·관련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 참여와 토론을 통한 정책결정의 모범사례 제시